

전 남

해남 마른김 제조공장 '전기로 폭탄'

내달부터 '농사용'서 '산업용' 전환 요금 2배 이상 올라...업체들 반발

해남지역 마른김 제조공장들이 다 음달부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뀔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바다에서 채취한 물김을 구입해 마른 김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이들 업

체들의 전기요금에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1kW에 36원(농사용)에서 87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해남군과 전국 마른김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28년 유지되던 김 제조공장 전기요금에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된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협회의 반발로 한달 늦춰졌다. 협회는 "4500여 김 생산 어민과 전국 마른김 협회(450개)가 인천에서 서남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양식을 하면서 연간 1억6000만달러의 김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마른 김 제조공장에 대한 전기 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제조 원가 상승에 따른 물김 값 폭락 등 직접적 피해 당사자

는 어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마른김 협회 정경섭 회장은 "전기요금에 산업용으로 바뀌면 공장당 한달 평균 요금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면서 "이는 김 양식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김 양식산업을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른김 생산 공장은 해남 120개소 등 전국에 320개가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제철 만난 미나리 수확 김진군 강진을 미나리밭에서 주민들이 새순이 돌아나기 시작한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강진군 제공>

전남농기원 육성 신품종 '참녹' 이용 고품질 가루 녹차 개발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는 자체 육성한 차나무 신품종 '참녹'을 이용해 최근 음료와 식품산업 소재로 이용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가루녹차(사진 왼쪽)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 가루 녹차 분말도(74μm)와 하루제품 생산량(3~5kg)과 비교해 6~10μm로 고분말이고 하루 15~2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참녹' 품종은 찾았이 진한 녹색으로 가루녹차를 가공하면 색깔이 기존 가루녹차보다 14% 이상 진하고 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맛이 부드럽워 가루 녹차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고품질의 가루녹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95% 차량처리한 찻잎을 수확해 증제 스틱형 건조시

켜 분쇄해야 한다. 특히 가루녹차는 음용 및 제과·제빵·아이스크림용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라떼 첨가용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물 추출 녹차에 비해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섭취력이 뛰어나 섬유소와 지용성 비타민 E 성분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신기호 박사는 "고품질의 가루녹차는 침체된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독일 프라운호퍼 전남도청서 정기 이사회 화순에 연구소 건립 본격화

응용과학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재단인 독일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건립공사가 올해 본격화된다.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연구소 건립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 이사회는 이날 박준영 전남지사와 홍익식 화순군수, 라이너 피셔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장, 서유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관 등 재단 이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예산 안 등을 의결했다. 연구소는 올해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내 1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000㎡ 규모의 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다. 또 바이오 의약품과 백신 연구개발 전문가 13명도 채용해 독일 프라운호

퍼 IME(분자생명공학 연구소) 연구소와 협력, 연구개발 사업도 벌일 방침이다. 한국생물의약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얻어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녹십자와 차병원백신연구소 교문을 역임한 문홍모씨를 초대 소장으로 영입했다. 전남도는 연구소가 국내 바이오신약과 백신개발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혁신적인 연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949년 설립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과학 연구기관으로 세계 각국에 총 80개의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광양항에 중소기업 전자재 가공단지

영순석재, 140억원 투자협약...배후단지에 물류창고·전시장도 건립

광양항에 중국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전자재 가공·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설립한 광양 국제 원부자재센터가 1년 6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중국 영순석재(유)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 직접 투자방식으로 국제 전자재상을 건립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은 중국 심양호텔에서 광양시장, 광양민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 국제 원부자재수급 지원센터장과 영순석재 유한공사 대표, 심양시 정부 비서장, 라오닝 석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서에 따르면 광양시, 경제

청, 원부자재센터와 라오닝 영순석재 유한공사가 광양항 배후단지에 16만 5000㎡(5만평) 내외의 부지규모에 물류창고, 가공공장, 업무, 전시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국제 전자재상의 총투자 예정액은 1차 141억원 중 현금투자가 53억원, 자본 재투자액이 88억원으로 알려졌다. 라오닝 영순석재 유한공사는 중국 라오닝성 최대의 석재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1억 위엔(약 200억원)이며, 단동 자체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날 협약체결 후 라오닝 영순석재 유한공사를 방문해 석재사

업에 대한 설명 및 현지 공장을 둘러 보고 업체규모 등을 파악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중국 선양시와 광양시간 국제물류 협력사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운영학 한민통상과정은 "국제 전자재상이 건립되면 연 2만5000 TEU 해상 물동량과 200명의 고용인력 창출은 물론 국내 최초 최대의 석재단지 전초기지가 조성돼 광양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국 라오닝 영순석재 관계자는 "3월 중 한국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계획서 작성 및 건립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py4079@

전 북

전주시 동산동 일대 효성 탄소공장 부지

내달중 토지 강제 수용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일대 효성 탄소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전체 176필지(28만 4000여㎡) 가운데 협의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127필지(21만9000여㎡)에 대해 3월 13일부터 강제수용키로 의결했다. 도는 토지주들의 반발로 지연되는 공장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매입비도 당초 제시된 293억원보다 1.36% 인상된 297억원

으로 결정했다. 한편 효성은 오는 2020년까지 1조 2000억원을 들여 전주시 팔복동과 동산동 일대 28만4000여㎡ 부지에 탄소 섬유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효성은 지난 8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7월까지 공장을 건립한 후 시험 생산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주시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탄소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해 탄소 소재의 조기 산업화를 이루려는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비료값 담합 항의 전농 전북도연맹 농민들이 지난 13일 전주시 농협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비료값 담합 집단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비료값 담합에 항의하며 비료를 뿌리고 있다. 전북도연맹은 최근 비료값 담합이 적발된 화학비료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기로 하고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연협뉴스

뉴스 브리핑

도내 5개 시·군 공공요금 인상계획 철회

도내 5개 시·군이 서민 물가안정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3종의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했다. 전북도 정현을 행정부지사와 익산시·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부단체장들은 14일 도청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협약을

체결했다. 5개 시·군이 인상을 철회하기로 한 공공요금에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3종이다. 도는 이들 시·군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른 시·군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읍시 저소득층 자활 '희망 리본 프로젝트'

정읍시는 올해 저소득층에게 취업·창업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인 '희망 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

다'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사업이다. 김병기 정읍시장은 "주민들이 자활근로와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자립지원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계획에 맞는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21일 시청 광장서 '사랑의 헌혈운동'

동절기 수혈용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대한적십자사 전북도 혈액원과 연계해 오는 21일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한다. 14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혈액 보유량은 3일분으

로 적정보유량 5일분에 60%밖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날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헌혈 전일 4시간 이상의 수면 및 금주, 3일 이내 약복용을 삼가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 만경 도서관 '함께 책임기' 사업 선정

김제 시립 만경 도서관이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의 '2012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사업'에 선정돼 210만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받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지원 등 총 46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책임기사업은 전국 550여

개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135개 도서관이 선정됐다. 김복두 시립 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배려계층 자녀에 대한 독서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경찰이 노약자·장애인 에스코트

격포파출소 '폴-드라이빙' 서비스 호응

부안경찰서 격포파출소(소장 임진욱)가 노년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수시책인 '폴-드라이빙'(Pol-driving)을 실시,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 '폴-드라이빙'(Pol-driving)서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활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무거운 짐 등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거나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격포파출소 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용 스티커 200매를 순찰활동중 노인들이 많



이 모이는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하여 '폴-드라이빙'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임진욱 격포 파출소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 범죄도 줄어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금강하구둑 바닷물 유통 갈등

충남 서천군 '수질 악화 독 일부 혈어야' 군산시 '용수 공급 차질'

군산시의 충남 서천군 사이 금강하구에 축조된 금강하구둑의 바닷물 유통 여부를 둘러싸고 양 지자체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군산시는 ▲농·공업용수 공급 차질 ▲취수장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금강 저지대 침수 우려 등의 이유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반면 서천군은 수질악화를 이유로 하구둑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금강하 수질이 크게 나빠지고 서천 쪽에 토사가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금강이 죽어가고 있다"며 "하구둑 일부를 철거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금강을

살릴 수 있다"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금강하구둑은 지난 1990년 농업·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사이 금강하구에 축조한 방조제로, 30m짜리 배수관문 20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2010년 초 '금강하구둑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충남도와 서천군이 요청한 해수유통 방안이 농경지 2만 3000여ha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에 대한 영향이 없는 데다 용수원 이 전때 드는 2400억~7700억원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서천군은 '국토해양부는 지역민의 삶을 무시한 부실하고 형식적인 금강 관련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이해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금강하구둑은 당초 농업, 공업 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된 것"이라면서 "수질 개선은 하구둑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희석기자 nogusu@